

‘17명 사상’ 학동 붕괴 참사 4년2개월만 형사 처벌 마무리

대법원 1부, ‘감형 2심’ 확정 판결

하청 2명 실행...원청 등 5명 집유

유족協 “전원 유죄 불구 솜방망이”

현산, 입찰비위 2심·행정소송 남아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사고 4년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 7명 중 실형 ‘하청 2명’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마용주 대법관)는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상고심에 대해 지난 14일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붕괴 참사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백술 건설 대표 조모(50대)씨와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0대)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철거 감리 차모(60대)씨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또 다른 하청사인 다원이엔씨 현장소장 김모(50대)씨는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피고인의 형량은 현장소장 서모(60대)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 안전부장 김모(60대)씨와 공무부장 노모(50대)씨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다.

피고인이 속한 법인에 대한 벌금은 현산 2천만원, 백술·한솔 각 3천만원이다.

◇“하청 근로자 안전 의무 원청에”

원·하청 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오갔던 재판의 쟁점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마련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에서 일을 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는 소속 직장 측이 아니라 발주처에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온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 근거가 된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형적 인災...“재발 방지책 필요”

수사 단계부터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한 전형적인 인재로 지목된 이번 참사의 결론에 대해 유가족들은 쓸쓸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선고 후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재난에 대해 현산은 벌금 2천만원,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개발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 진상 규명,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학동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안전이 생명보다 가벼이 여기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산, 입찰비위 2심·행정소송 남아

붕괴 참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끝났지만, 현산은 아직 법정에 더 서야 한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산 법인 등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지난 14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해당 재판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계약을 현산과 한솔기업이 부당하게 맺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현산 간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한솔기업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현산 법인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여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도 진행 중이다.

현산은 과징금 1심에선 이겼으나 영업정지는 패소했다.

이와 함께 현산이 2022년 4월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까지 여파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재개발 전망이다.

/안재영 기자



지난 16일 이른 오전 여수시 신북항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 A호(2천692t급)와 용달선 B호(24t급)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화 중이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승선원 18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B호 선장은 끝내 사망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 신북항서 선박 2척 불...1명 사망

2명도 화상 피해

여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과 용달선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4분께 여수시 신북항에서 2천692t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와 옆에 있던 24t급 용달선 B호에

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여수해경 등 구조 당국은 오전 7시45분께 진화를 마무리했고, 두 배의 승선원 18명(A호 14명, B호 4명)을 모두 구조했다.

다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B호 선장은 결국 숨졌고 A호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2명도 화상을 피해를 입었다.

A호에는 약 2천500t의 유해 화학물질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후 현장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됐다. 아직까지 해양 오염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호와 B호 중 어느 배에서 먼저 불이 났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살해 협박’에 난민 신청한 외국인 2심도 ‘불인정’

‘단기 방문’ 입국 후 즉시 청구

“요건 안돼...주장 신빙성도 無”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보상하지 않을 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난민 체류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고법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8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 15일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해 9월1일 난민 인정을 신청

했다.

신청 후 9개월여가 지난 2023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본 소송에서 “동업자의 사기에 연루됐는데 피해자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 쓰레기소각장 설명회서

공무원 폭행 50대 주민 입건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발한 주민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선정된 삼거동 일대의 환경을 분석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2차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인근 합평군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고, 귀가하던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A씨를 입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육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